

시론

한국, '다인종·다민족국가' 상응한 정책 서둘러야



박준수 시인·경영학박사

한국이 급변 들어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OECD기준 '다인종·다민족국가'에 진입했다. 광주외국인 비율은 3%를 차지하고 있다. 동별로는 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 평동이 가장 많고 월곡동이 뒤를 잇고 있다.

월곡동은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마을이 특색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간판과 낯선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지나는 주택가 거리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리핀 이주여성 리카(Rica 46)씨가 강의하는 영어회화 교실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목·금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열리는 영어회화 교실에는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권 이주민도 참여하고 있어 '작은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2년 전 이 회화반에 등록하면서 리카씨를 만나게 됐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 후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이주한 친척의 주선으로 광주로 시집오게 됐다. 그녀가 2005년 결혼했을 때 남편은 트럭 운전사였으며,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

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녀도 맞벌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터라 영어 구사가 원활해 유치원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로 일하게 됐다.

그녀의 성실한 태도와 경력이 더해지면서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는 일주일에 3개 강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커뮤니티센터와 학원 각각 3곳, 개인과 의 등 스케줄이 빡빡하다.

어떤 날에는 여러 곳의 강의 장소로 이동하느라 종종 점심식사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대학 재학 중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두고 있는 그녀는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한국에서 살면서 좋은 점을 물으니 무려 10가지 넘게 열거했다. 먼저 한국은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장점을 꼽았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돼 있고 K-팝, 음식, 패션, 화장품, 스포츠 등 문화가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문화와 전통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부러워했다.

반면 한국 생활의 단점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비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채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고 무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KLLP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시험과 인터뷰를 통과하느라 힘들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토로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일상생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온 이후 줄곧 영어를 사용해야 했기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대화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단편적으로 의사전달이 이뤄진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렇다면 리카씨와 같은 동남아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포탈에 올라온 댓글을 살펴보면 두 갈래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은 "먼 나라에 시집와서 정말 고생이 많네. 한국에서의 생활을 꽤 만족하고 계산 것 같아 다행이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응원할게요"라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 국적을 쉽게 주면 절대 안되고, 유럽을 보세.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필리핀은 쉽게 남에게 국적을 주나요? 자기 나라의 자기가 지켜야 하고 국적 취득 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지를 증명하는 게 당연한 거죠"라며 엄격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유럽의 난민 갈등 생각하면 저출산 시대지만 외국인 유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이민을 기술과 재산이 있는 사람 위주로 받아 들여서 외국인 유입자가 저소득으로 복지 무임승차와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주민을 둘러싼 상반된 견해는 앞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인종·다민족국가'로서 발생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기고

진정한 의미의 여론



이동근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그야말로 여론조사 전성시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흔히 여론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떠올리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은 아니다. 언론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와 공중의 실제 의견인 여론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의 감정의 깊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어떤 여론조사도 선거에서 승자를 정확히 예견하지 못한다. 어떤 사회과학 연구 방법도 선거 당일 실제로 투표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쾌하게 알려 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대답한 대로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물리적 다수의 생각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만장일치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무리 형편없는 생각이라도 구성원 중 다수의 생각을 이쁘게 바랄까봐 의견, 즉 여론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복수의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자가 가장 적합한 인물로 결정되는 선거제도 역시 다수의 의견이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질척같이 캄캄한 밤중에 망망대해에서 배가 난파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쪽이 어느 쪽인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다수가 서쪽을 동쪽이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서쪽이 동쪽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다수결의 원칙대로 서쪽을 동쪽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다. 그래서 엉뚱한 후보자가 다수의 지지로 막중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제도다.

여론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의 집합체다. 미국에서 여론에 관한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버나드 헤네시(Bernard Hennessy)가 쓴 'Public Opinion'에서 여론은 일반성을 지닌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고, 통계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확정된 것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체도 아니라고 했다. 헤네시는 여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 종합, 평가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현실로 봤다.

헤네시의 저서와 같은 제목의 책 'Public Opinion'을 쓴 미국의 언론인이자 사상가인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여론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이해한 리프먼은 여론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여론을 기반으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리프먼은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을 '전지전능한 시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민주주의 제도가 전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했다. 리프먼은 보통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념은 현명하지 못하며 무지해 입각한 민주적 결정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했다. 보통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획득했다고 본 리프먼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고조된 21세기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백여 년 전 리프먼이 지적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른바 '식견(識見)'이 있는 시민'(well-informed citizen)은 제한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한 처방적 지식을 갖고 애매모호한 감정과 열정의 비합리성을 쉽게 묵인하는 보통 사람도 아니다.

'식견이 있는 시민'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노력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이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을 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으로 둔갑해 사회적으로 승인을 얻는 것은 민주주의의 병점이다. 다수의 무지한 보통 사람들이 아닌 식견이 있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습득과 정보 활용이야말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전제 조건이다. 단순히 물리적 다수의 의견이 아닌, '식견 있는 시민들의 지혜'인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 형성되려면 성숙한 시민의식과 언론의 건전한 공론장 역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社說

국립의대 대학 공모로 급선회, 전남도 독심 통할까

김영록 전남지사가 담화문을 내고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공모방식으로 추진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4·10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분출한 만큼 이후에도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 대학과 지자체, 주민들은 한결같이 의대 유치를 주장해왔다. 전남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한 쪽은 탈락한다. 쉽게 승복하기 힘든 구조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수요가 결코 다르지 않지 않지 않다. 동부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전남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많아 외상센터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체계가 필요한 지역이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섬이 많고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조선업 관련 응급 수요 역시 무척 높지만 시스템은 부재하고 필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30년 숙원이다. 각기 의대 신설에 대비해 제반 역량을 결집해 왔기에 당연하게 지장될 것이라 확신한다. 전남도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

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겠다고 했음에도 결국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강한 반발과 함께 원만히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완결성, 도민 건강권, 지역 상생발전, 공정성 확보 등 4대 원칙을 기조로 2026학년도 신설(정원 200명)을 목표로 했다.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유치를 놓고 지역사회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의 이유로 단일 의대로 급선회했다. 김지사는 앞서 캐나타 현지를 찾아 노던 온타리오 대학의 성공적인 공동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1991년 목포대가 의과대학을 처음 추진한 후 번번이 좌절됐다. 물꼬를 트기까지 의회와 시민사회, 국회의원, 자치단체, 대학 등을 망라, 총력전을 펼쳤다.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발휘해야 한다. 만약 분열하면 다시 실패한다. 가시밭길이 놓였다.

호주머니 돈처럼 예산 낭비한 광주시 산하기관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이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이다.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보고서는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다. 광주연구원 정관에 재직이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 이는 상법 조항을 위반한 중대 과실이기도 하며 이미 집행한 예산 또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됐다.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다음 연도 운영 방향과 1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기이사회를 서면으로 심의, 뒷말을 놓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히 돈이 잘못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류를 알고 서도 바로잡지는 커녕 1회 추경까지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수당 지급도 주먹구구식

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무려 1천 9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ICT-SW 지원 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에게 1회당 30만원씩 총 5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남도창학회 등은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한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하지만 10억 8천100만원을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광주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오류가 심각한 지경이다. 곳곳에서 위법 사례가 수도무다하다. 제 호주머니 돈처럼 낭비했다.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산하기관을 통폐합했다고 해도 모두 19곳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루빨리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혁신의 고삐를 더 죄야 한다. 작은 돈에 비해 너무나 막대한 운영을 더는 묵인해선 안 된다.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시민들은 기가 막힌다.



독자투고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자

경찰관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및 운영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4월 30일까지 1차 기간인데 각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편리한 방법이란 무기 등 현품을 신고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신고,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할 경우에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며, 관련법에 의해 기소 중지된 자나 수사중인 자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총기류는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3년~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호기심이나 장난삼

아 또는 취미로 불법무기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런 이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꾸는 소중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무기류를 근절해야겠다. <김주영·함평경찰서 월아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고문의 650-2099 | FAX 650-2016 |
| 정치부 650-2030 | 사진부 650-2080 | 마케팅본부 650-2070 | 광고국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설실 650-2006 | 경영지원국 650-2011 | 편집국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 V 본부 650-2009 | 사업본부 650-2007 | 입부국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786-9488 | 업무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01 / ·규토록 월 15,000원 1부 800원